

尹 담당 재판장 ‘룸살롱 술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민주 “강남 최고급 룸살롱이란 사실 확인… 불법 가능성”
법원행정처장 “금시초문… 자료 주면 윤리감사실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룸살롱 술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검찰 실시를 촉구했다. 사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지 판사의 의혹에 관련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 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민주당

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문회에서 지 판사의 술집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지 판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자 전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만호 기자



“지귀연을 즉각 탄핵하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귀연 판사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조희대 특검·대법 판결 헌법소원법 법사위 상정

민주·혁신당 찬성 표결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특별검사)법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표결로 상정했다. 특검법 등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을 통해 상정이 이뤄졌다.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

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부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지난달 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1일 선고한 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 이틀날(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담당하고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던 점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배 가량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뉴스1



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②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북지역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도내 단체 이재명 지지 선언 잇따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안근웅)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춘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준비된 후보, 강한 리더십으로 위기 극복할 책임자”

먼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회원 25명은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실력과 비전, 강한 추진력을 갖춘 준비된 후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근웅 전북도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불법 계엄과 사법 쿠데타, 극심한 국민 갈등, 경제 파탄, 지역 불균형, 사회 양극화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같은 핵심 과제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로 되돌아갈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라며 “이런 패일수록 준비된 후보, 실력 있는 후보가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 다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해 온 인물”이라며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아동과 노인,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 비전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국가적 리더십을 갖췄다”며 “자이이 아닌 공익을 우선하며 실천해 온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

명 후보가 주거복지와 공동주택 관리 정책에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갖고 있다”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실행력을 두루 갖춘 지도자”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회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를 내걸며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및 유통 관련 공약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는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첫 사례로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지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박춘관 이사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기업 유통자

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지역의 소형 수퍼마켓과 영세 유통업체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유통 공공성 강화 △공공물류체계 지원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절감 등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표면적인 지원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에게 큰 신뢰를 갖게 됐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지지 선언 직후, 조합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을 방문해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전북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이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은 민주당의 기본 가치에 부합하며, 오늘 협약이 이재명 후보의 실용적 경제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첫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기관 22~26일 공개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부문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운영을 맡을 기관을 오는 22~26일 공개 모집한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지역밀착형으로 추진되는 녹색소비 기반 조성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처음으로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3,600만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3,600만원을 추가 매칭하여 총 7,200만원의 예산을 운영기관에 지원할 예정이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소비 교육 및 친환경 소비자 양성 △친환경소비 캠페인 운영 △환경표지 인증 지원 △녹색매장 확대 및 모니터링 등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법인은 전북자치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식을 작성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북도청 탄소중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략 마련 차별화

도, 전북만의 금융모델 포함 자산운용 중심 개발계획 수립

제2회 NPS 포럼 연계 증권학회 주최 특별심포지엄서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에 나섰다.

14일 전주에서 열린 ‘제2회 NPS포럼’ 연계 특별심포지엄에서는 ‘제3 금융중심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북 금융생태계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증권학회(회장장 전진규 동국대 교수)가 주최했다.

심포지엄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과 극복과제 (정희준 전주대 교수), △책임자본의 진화: 글로벌 연기금의 투자 전략과 시사점 (조은영 충남대 교수) 등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정희준 교수는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핀테크 금융, 농생명금융 등 지역 특화 분야 육성이 핵심”이라며 “기존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자산운용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법과 혁신도시법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금융중심지법 내 ‘특화목적금융중심지’ 조항 신설 등을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패널토론에 참여해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금융권 및 전문가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도는 이번 심포지엄이 전북만의 차별화된 금융모델 구상과 자산운용 중심 클로

벌 금융도시 도약에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자산운용사 유치,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도민 대상 실용금융교육 확대 등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증권학회와 같은 전문가와의 교류와 협력, 소통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북 금융산업 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이준석 “국힘,尹에 목줄 잡힌 정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이라는 당원에게 무슨 약점을 잡아서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대표 이준석은 수사도 종결 안 되고 기소가 안 돼도 대표직도 잘리고 당원권 정치(개입)를 때렸다. 양두구육이라고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년을 추가로 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을 당한 도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 개시 및 진행도 안하고 ‘제발 탈당해달라’고 읍소하느라 시간보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법치를 논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면 이를 국민의힘이 해산하려는 노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난 3년 전에 선거도 이기고 보수를 혁신하려고 하던 당대표를 내쫓아낼 때는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모함을 하는데도 일사불란하게 진행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눈으로 목도한 계엄을 일으키고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자당의 당원 윤석열에 대해서 모든 혐의를 배풀고 있다”며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윤석열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